스토킹, 탐정의 새로운 책무

단 상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주임교수

정부가 지난 7월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와 이동 방향을 알리고,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와 주거지 지능형 CCTV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분명 진일보한 대책이다. 그러나 제도가 촘촘해질수록 이를 작동시키는 최초의 위험 판단은 더욱 중요해진다. 밀착 경호와 접근금지, 전자감독과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처한 위험이 확인되고 관계기관에 전달돼야 비로소 가동된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지 않거나 흘어진 피해 사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보호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루 수십차례의 연락, 직장 앞 대기, 인간관계 통제, 계정 감시, 차량 위치추적, 주거지 배회, 살해를 암시하는 말이 반복되며 수위가 높아진다. 개별 행위만 보면 사소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폭력의 반복성과 위험의 상승 과정이 드러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 차원의 공익적 사실조사 기능이 필요하다. 탐정은 가해자를 응징하거나 수사기관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정확히 설명하고 경찰·상담기관·법률지원 등 공적 보호체계에 신속히 진입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탐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알아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빨리 안전해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탐정의 첫 번째 책무는 피해자의 현재 신변안전과 긴급위험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일이다. 피해자를 처음 만난 탐정의 질문은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가 아니라 "지금 안전한 상태입니까"여야 한다. 흉기 소지, 목을 조른 전력, 주거침입, 살해 협박, 접근금지 위반, 이별 뒤 폭력의 심화가 확인되면 자체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즉시 112 신고와 피해자 분리, 상담기관 연계가 우선이다. 위험한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 보호조치 대상이다.

두 번째 책무는 피해자가 보유한 피해자료와 안전 관련 위험 신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문자와 메신저, 부재중 전화, 직장 앞 대기, 주거지 접근, SNS 사칭, 진단서와 상처 사진 등을 일시·장소·행위·자료별로 분류해야 한다. 수백장의 화면 갈무리를 그대로 제시하기보다 사실관계 정리표와 보유자료 목록을 만들어 반복성과 위험의 상승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책무는 피해자 안전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출·퇴근 동선을 조정하고 도어록과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휴대전화·차량 앱의 위치공유 설정과 로그인 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직장이나 학교에 비상연락 방법을 알리고 가족·동료와 비상암호를 정해 두는 것도 현실적인 안전 대책이다.

네 번째 책무는 피해자를 공적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일이다. 탐정은 피해자를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 변호사 등과 연계하고 필요하면 신고와 상담 과정에 동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실관계 정리표와 보유자료 목록을 활용해 관계기관에 직접 설명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장의 공권력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일선 경찰관이 수많은 신고를 처리하면서 장기간의 관계사와 디지털 기록, 반복되는 폭행와 위협까지 정밀하게 구조화하기는 어렵다. 이는 경찰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민간 전문영역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할 문제다.

강제수사와 가해자 격리, 형의 판단과 처벌은 국가기관의 몫이다. 반면 신고 전후 피해자 곁에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안전계획을 마련하는 일은 전문교육을 받은 민간 조사자가 보완할 수 있다. 탐정은 경찰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찰의 강제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사실과 기록을 연결하는 민관 치안의 조력자여야 한다.

정권교체 후 '공소 취소 특검' 책임 묻는다



아침햇살

고하승 주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와 사법부 간섭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여당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 입법 폭주를 하거나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간섭하는 이유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인데 그걸 제지하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 불리던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야당의 집단적인 반대에도 끝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하고 말았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라고 항변하며 집단퇴장했으나 서영교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한 만큼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 취소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바꿔치기'라거나 '재판 대신 '항소 취소'로 대통령 죄를 지워버리는 게 목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온라인상에 넘쳐 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엉터리 같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여당의 폭주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집권당이 대통령 본인의 죄를 지워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말리겠는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이를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기소된 것이 잘못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인의 사건 기소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이다. 이건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특권이다.

이 법안의 목적이 '이재명 죄 없애주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에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힘을 과신한 탓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이 무슨 짓인들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 탓이다.

물론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법안을 만들더라도 야당은 그걸 저지할 힘이 없다. 그리고 당장 그런 법안을 만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힘도 없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지금 흥위병처럼 날뛰는 사람들도 차기 총선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석이 지금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렇게 해서 정국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마저 교체되면,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흔들어댄 의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이 만들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명심하라. 정권교체 후 반드시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기 고

다중밀집시설 흉기난동, 선제적 예방 필요



이유정
부천소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사지구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밀집시설에서의 흉기난동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는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 발생 전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안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다중밀집시설의 범죄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동인구와 범죄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업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CCTV 관제센터 및 시설 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흉기 난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해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한편 시민 대피와 피해자 보호, 부상자 구호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시민 역시 다중밀집시설 이용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평소 시설내 비상구와 대피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수상한 행동이나 위험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 다가가거나 제지하기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현재 위치와 범인의 인상착의, 흉기 소지 여부, 이동 방향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주변에 출구가 있다면 범인과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잠글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해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무리하게 제압하려 해서는 안된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나 소방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시설 관리자와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비상 대피로와 CCTV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 의심 상황 발견시 신고 요령과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범죄 취약요인 점검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시민의 곁을 지키며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제보 (02)3676-2114 구독신청 (02)926-0217
편집국 대표 (02)3676-2114 FAX (02)762-8223
정치·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926-0392
사회·수도권부 (02)926-0314 편집부 (02)926-0242
총무국 (02)926-0217 영업국 (02)926-0164 FAX (02)762-8223
광고문의 (02)926-0164 윤전부 (032)675-7956

발행·편집인 조윤상 편집국장 이영란 인쇄인 장용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사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1994년 9월 26일 창간 · 2012년 6월 1일 재창간
2001년 10월 8일 등록번호 서울,가00028호 (日刊)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1(여의도동, 국동VIP빌딩 6층) 구독료 |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화원농협
이맑은김치

화원농협 이맑은김치 유튜브, SNS 채널에서는 화원농협의 소식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
- 화원농협 이맑은김치 쇼핑몰 (www.해남화원농협.com / www.hwkimchi.com)
- 농협몰 (www.nonghyupmall.com)
- 이마트몰(emart.ssg.com)
- 해남미소, 남도장터
- 쿠팡, G마켓, 11번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hwkimchi)

| 오프라인 |
- 농협하나로클럽 (양재, 창동, 성남, 고양, 삼송, 수원, 목포, 광주 등)
- 신세계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랜드리테일
- 이마트몰(emart.ssg.com)
- 해남, 목포, 영암, 완도, 진도지역 학교급식
- 해남 관내 관공서 및 병원
- 목포, 부산대리점



이맑은김치 상품



